

민주당, 금주 쌍특검 재표결 방침

與野 갈등에 수정안 협상 목소리

국민의힘, 위험적인 요소 지적
독소조항 제거·수사범위 축소 협상
민주당, 부결에도 바로 재발의 입장
명태균 의혹 분리해 이탈표 공약 제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주 내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 법안 재표결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탈표를 얼마나 관리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쌍특검법안은 야당 주도로 발의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위험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두 특검법안 모두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했다.

민주당은 이르던 오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원래 더 일찍 재표결하려고 했으나, 12·29 항공 참사가 벌어져 일정이 늦춰졌다.

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해 정부·여당을 압박한다는 계획

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위험적인 요소를 지적하며 모두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라서 여야의 갈등이 예상된다.

법안 본회의 재의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이상 찬성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 192명이 모두 재의결 찬성표를 던질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재의결된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국민의힘은 각종 법안 재표결 과정에서 단일대오를 유지해왔지만,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에 5명(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 김 여사 특검법(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의원)에 4명이 찬성 투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틀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선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2주차를 맞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내세운 '당의 안정과 통합'은 쌍특검법안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경우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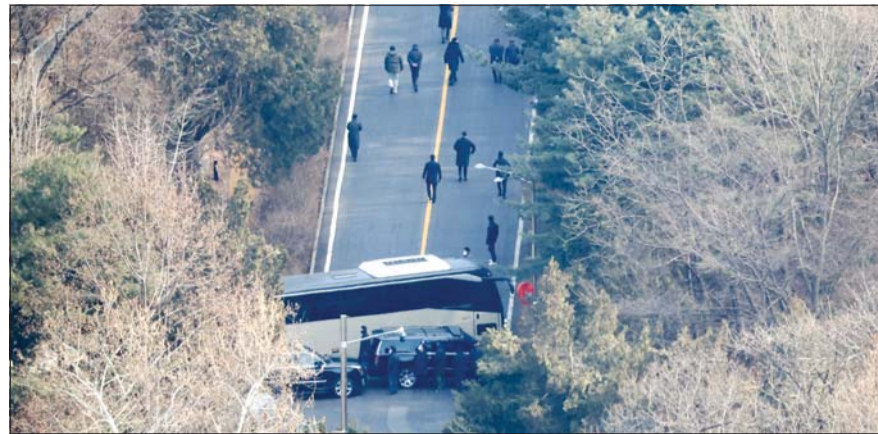
윤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제안 특검법에 하자가 있더라도 거부할 명분이 정치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약해졌다"며 "(특검법에) 찬성할 계획인데 얼마나 많은 소장파, 소신파 의원들이 소신에 따른 투표를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일각에선 특검법 수정안을 테이블에 놓고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주요 반대 이유인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수사범위를 축소하는 식으로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여권에서 가장 거부감이 심한 '명태균 의혹'을 김건희 특검법에서 분리하는 식으로 수정안을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은 '명태균 의혹'을 김건희 특검에서 분리해야 여당의 이탈표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쌍특검법안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기대선 전망에 딜레마 빠진 국민의힘

尹 방탄 정당 vs 배신자 프레임 속 갈등
대통령 아닌 법질서 지키기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호소 입장을 내거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면서,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일단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등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있지만, 이대로면 '내란 동조 정당' '尹 방탄 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또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화한 것을 두고 탄핵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부 의원들은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철규·김민전·이인선·조배숙·임종득·박성민·구자근·강승규 의원 등은 전날(4일)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3일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당은 이들의 집회 참석을 '개별 의원 차원'이라며 당 차원의 방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안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도, '윤석열 지키기'는 아니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면서도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질서,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태도는 지지층과 조기 대선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을 피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중적 태도를 보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尹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야당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공세를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기 대선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결별하면 강성 지지층의 반발과 당의 분열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려면 외연 확장이 필요해서다. 특히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을 찾은 강성 지지층에게 편지를 보낸 데 대해, 당내에서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행보가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이 불리하게 흘러갈 경우, 여당도 관계 단절 결심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 기자

얼어붙은 정국... 국정협의회체 가동 '깜깜'

국정혼란 수습 위해 금주 가동 예정
반도체특별법, 추경 등 올릴 방침
쌍특검법,尹 체포에 '대립' 예고

여야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국정협의회체의 실무기구를 이번 주 가동할 예정이다. 국정협의회체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하지만 쌍특검법(내란 일반·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번 주 내 이뤄질 예정이다. 국정협의회체의 원활한 가동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정협의회체가 출발부터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정협의회체 회의에 앞서 2+2(정책위의장·당대표 비서실장) 실무기구를 구성해 의제와 회의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을 조율한다. 지난해 말 여야는 국정협의회체 출범을 합의하고 실무 회동을 할 예정이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였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체에서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반 전력망 확충법 등 미래 민생 법안 처리를 회의 의제로 올릴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



박찬대(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정협의회체 실무기구 가동이 무사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이번 주 내로 재표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합의를 부탁했으나, 합의안이 도출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재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다시 한번 벌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대립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오는 6일 만료될 예정이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대치 끝에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집행될 전망인데, 여야 간 긴

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만일 체포영장 재집행으로 인해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는 등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 진입했을 때 경호처가 발포 명령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긴장감은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민주당 "崔대행, 긴급 추경 즉각 편성하라"

정책위원회 "민생경제 회복 위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장기 내수부진과 12·3 내란사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서 밝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은 경제상황 인식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폐업 100만 시대이다. 75%의 자영업자가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95만명의 소득이 0원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3고(高)로 '가처분소득 감소, 소비 급감, 매출 하락, 폐업 급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12·3 내란사태로 환율이 폭등하고 소비는 더욱 급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

인에게 직격탄을 날렸다"고 주장했다.

정책위원회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며 "자신·대기업 등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주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금융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강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소비를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새해를 맞아 많은 지자체에서 골목상권과 가계경제 부양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확대를 시행하자 오픈런이 일어나고 조기마감됐다. 재정이 소비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지체없이 추경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즉각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